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2014.7.29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는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동의하는 것은 지금의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빈곤 완화 방안을 통해 불평등 수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불평등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는 대규모 실업과 함께 노동시장 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안 좋은 일자리들을 증가시켰고 이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지표들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 5분위 배율¹⁾, 10분위 임금 대비 90분위 임금 비교 모두에서 1997년 직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위기 직후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가처분 소득과 시장 소득 모두에서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소득 불평등도가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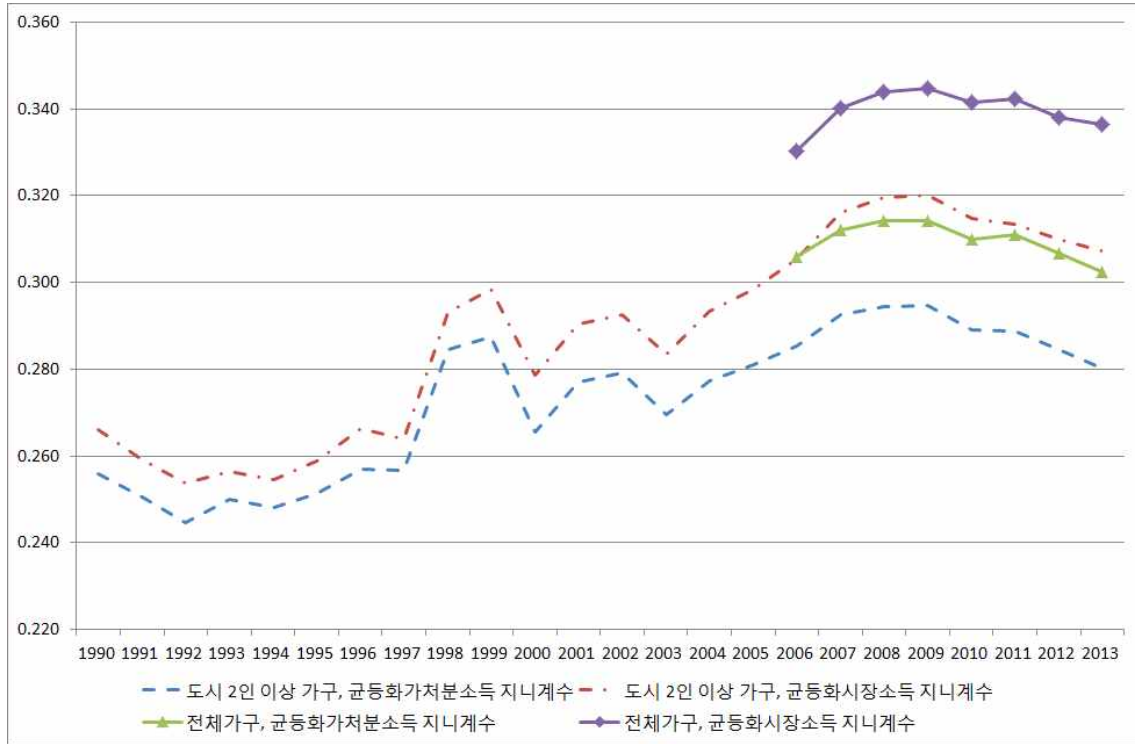
1)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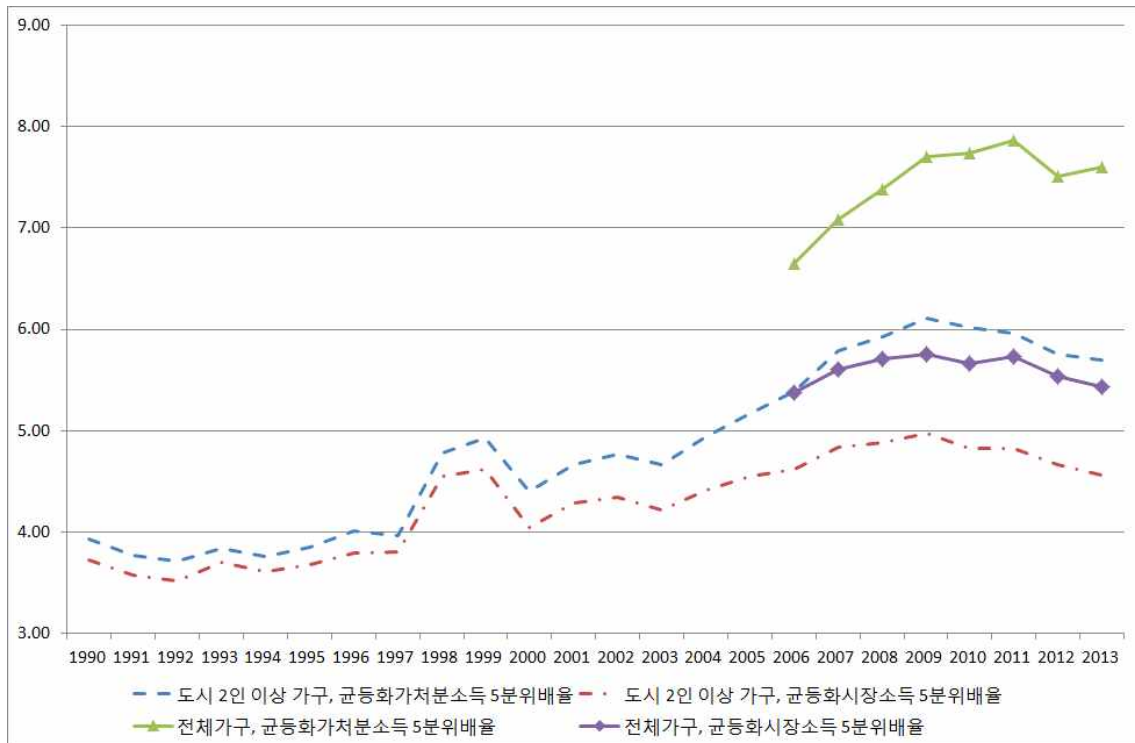


[그림 5]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와 시장 소득 지니계수 : 1990년 ~ 2013년



출처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그림 6] 가처분 소득 5분위배율과 시장 소득 5분위배율 : 1990년 ~ 2013년



출처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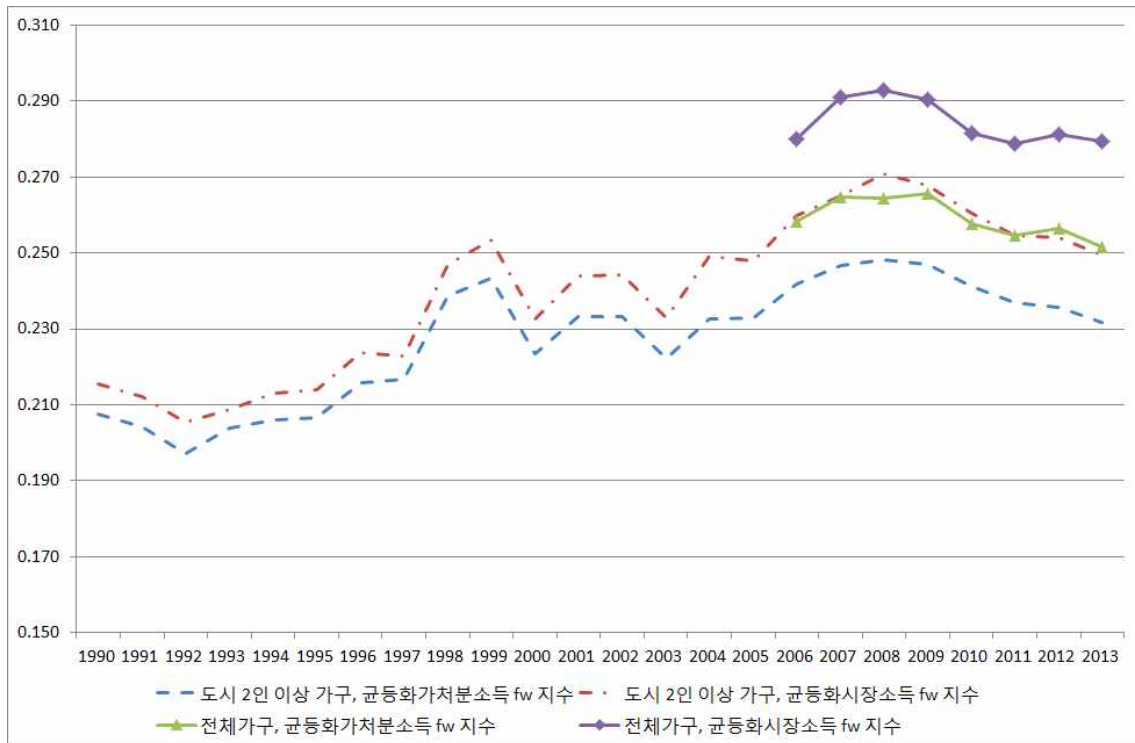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시장에서 개인이 얻은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시장소득’을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와 이런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비소비지출을 빼 가구에서 실제로 소비에 사용가능한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 모두에서 2010년부터 지니계수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불평등 완화 추세는 5분위배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와 함께 양극화 역시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는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들을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완화되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적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Foster와 Wolfson이 개발한 양극화 지수²⁾를 통해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지수도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가처분 FW지수와 시장 소득 FW지수 : 1990년 ~ 2013년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자료 이용 계산

※ FW지수는 Foster and Wolfson이 사용한 양극화 지수를 가리킴

2) Foster, J.E. and Wolfson, M.C. (1992)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OPHI Working paper No. 31. 참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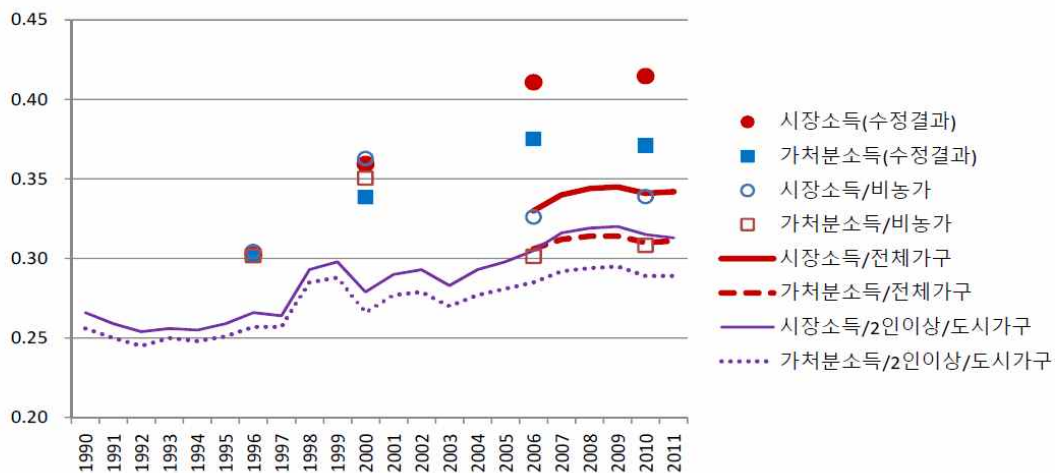


소득 불평등은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은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청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통계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현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분배 지표에 사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 소득이 매우 높은 초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 이용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수준을 과수추정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김낙년 교수³⁾의 경우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소득세 자료로 보완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지니계수와 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직접 계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통계청의 발표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 8]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김낙년(2013)의 수정결과 비교



출처 :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p. 37

하지만 자료의 정확성, 확실성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김낙년, 김종일(2013)의 결과 역시 완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 자료에 비해 현실설명력 측면에서 분명

3) 김낙년 (2013) 한국의 소득분배, 낙성대연구소 Working Paper 2013-06,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권 2호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소득세 자료를 결합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정하는데 있어 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원자료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지속적인 개선 방안 필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수용할 경우에도 2010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상위층의 소득 상승률이 줄어들어 소득 하위층과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거나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낮아졌던 소득 상위층의 소득 증가율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13년 들어 2012년에 비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 상위층과 소득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다시 확대될 경우 2010년 이후 보였던 소득 불평등 완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의 추가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향후 한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소득 불평등 동향을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표본 수가 작아 큰 변화를 보이는 6인 이상 가구들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구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3인 이상 가구들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얻을 경우 전체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2010년 이후 전체 가구의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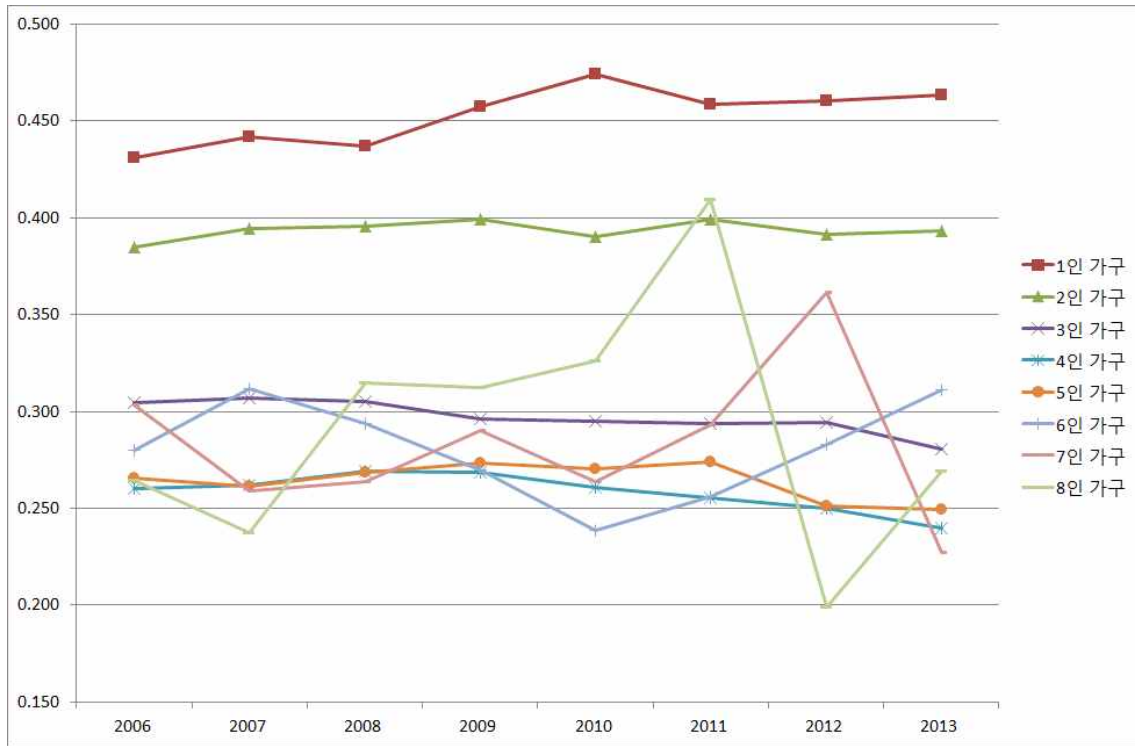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 수준 완화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노동시장에 나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니계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2013년 들어 모두 지니계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소득 불평등 완화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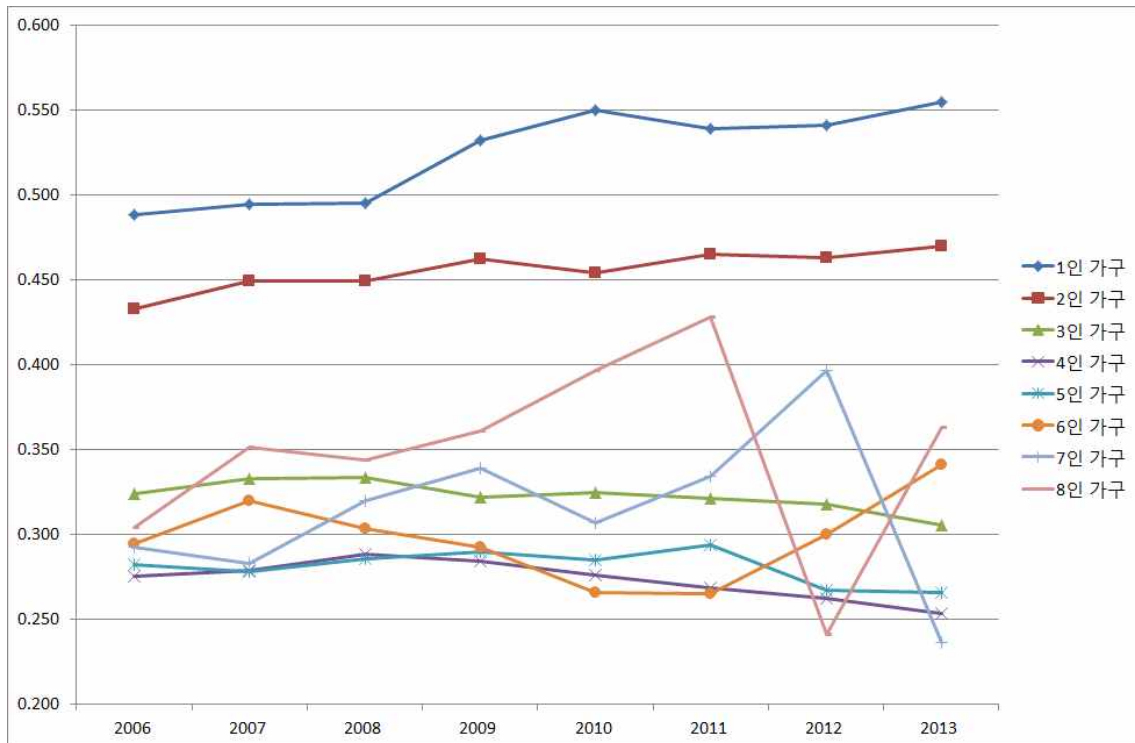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 9] 가구원 수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그림 10] 가구원 수별 균등화 시장소득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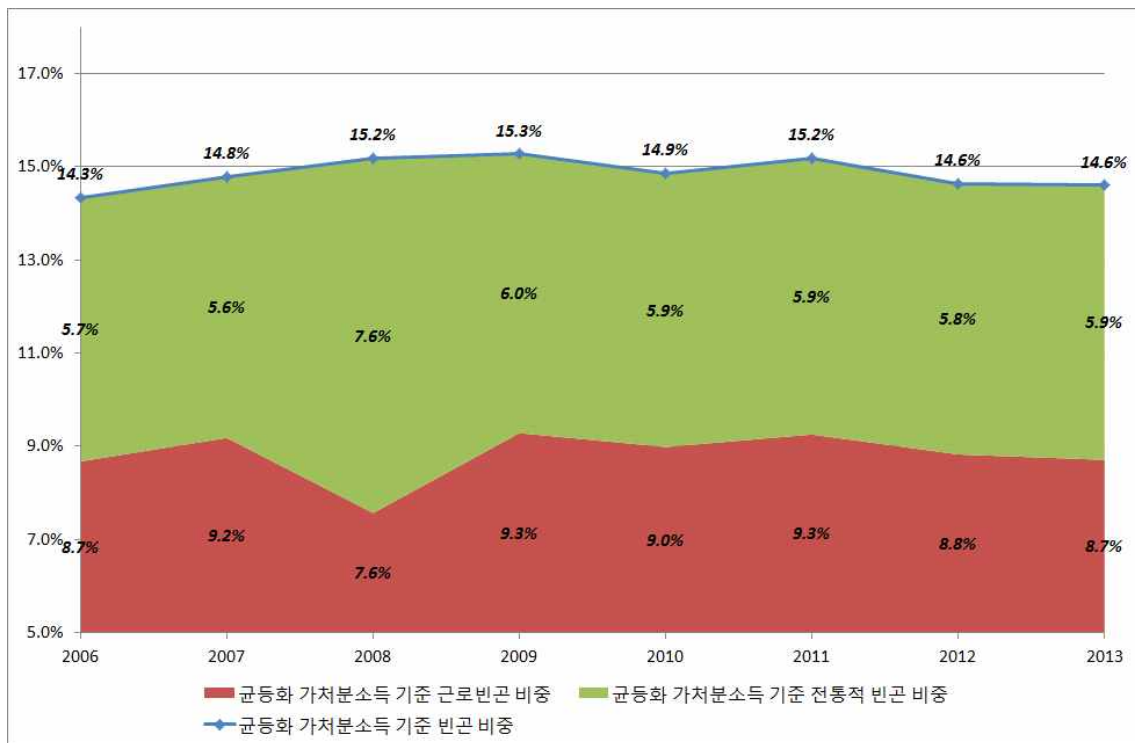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소득 불평등 악화는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구매력 저하와 소비 위축 등을 야기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할 경우 정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낙년 교수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 않거나, 통계청의 발표를 따라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불평등 수준이 2000년대 중반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불평등의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효과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거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 소득 중 비중이 가장 큰 노동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세금, 공적이전소득을 활용하여 가처분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림 11]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 및 근로빈곤 인구의 비중 (단위 : %)




또한 정부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 완화의 수단 중 하나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곤에 직면한 이들은 생계유지조차 힘든 이들로 즉각적인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도 개선시킬 수 있다. 통계청의 소득분배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전체 인구 중 빈곤에 직면한 이들의 비중은 2013년 현재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6%,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8%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층의 상대적 규모는 최근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기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워킹 푸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측면에서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어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기존의 빈곤층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2013년 현재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8.7%이다. 이는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인 60%에 달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7월 2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